

“美 인권외교 포기가 광주학살 결정적 영향”

5·18재단, 주한미대사관과 국무성 주고 받은 문건 분석 카터 행정부 외교정책 ‘안보’ 전환하며 신군부 학살 묵인

5·18민중항쟁 당시 미국 정부의 ‘인권 외교 포기’가 광주학살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당시 인권 중시 외교를 펼치던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을 기점으로 안보와 안정을 중시하는 쪽으로 외교정책의 방향을 선회한 것이 전두환 등 신군부의 군대 동원에 의한 광주학살을 불러왔다는 주장이다.

그동안 미국이 5·18 당시 신군부의 군병력 광주투입을 승인 또는 묵인해왔다는 사실은 수차례 확인된 바 있으나 이러한

결정의 배경에 카터 행정부의 외교정책 변화가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 결과는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22면>

5·18기념재단은 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카터 행정부의 대한(對韓)정책 프레임 전환과 5·18’이라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 자료는 지난 1월 마크 리퍼트 당시 주한미국대사가 이임을 앞두고 5·18재단에 기증한 미국 정부문서 89건으로, 1980년 주한 미대사관과 미 국무성이 주고 받은 전문이다.

최용주(60) 5·18재단 비상임연구원 분석

에 따르면, 카터 당시 미국 대통령은 1979년 6월 방한해 박정희 정권에 한국 인권상황 개선을 요구하는 외교정책을 추진했다. 구체적으로는 정치범 석방, 긴급조치 9호 폐기를 요구했다. 최 연구원은 카터 행정부 외교정책의 방향이 10·26과 이후 혼란기를 맞아 ‘인권 중시’에서 ‘안정’으로 급변했다고 이는 전두환 신군부에 의한 광주학살을 묵인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정책 전환 배경에는 클라이스틴 당시 주한미국대사의 한국정치 발전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에 따른 ‘신중론’(또는 소극적 대응)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최 연구원은 주장했다. 비슷한 시기에 벌어진 이란 팔레비 왕조 몰락과 주이란미국대사관 점거·피랍사건도 미국의 외교정책 변화에

커다란 영향을 줬다는 게 최 연구원의 분석이다. 미 행정부의 도덕 우선, 인권 중시 외교가 대상국(독재국가)의 민주화를 촉진하기 보다는 사회 불안을 가중시키고 자국 이익에도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다. 최 연구원은 미국 국무성이 1979년 12월 4일 주한 미 대사관에 보낸 전문 등을 근거자료로 제시했다.

최 연구원은 “국가폭력에 맞섰던 광주 시민의 집합행동(항쟁)이 비극적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외교정책 전환이 크게 작용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면서 “이러한 외교정책 변화가 신군부의 군대를 동원한 학살을 승인 또는 묵인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김정욱기자 khh@

5·18때 주한미국대사 역할은

‘시위’ 아닌 ‘폭동’ 보고 광주상황 왜곡 불렀다

5·18기념재단이 7일 공개한 ‘카터 행정부의 대한(對韓)정책 프레임 전환과 5·18’이라는 연구보고서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5·18당시 주한미국대사의 역할이다. 당시 클라이스틴 주한미국대사는 광주 상황을 실제와는 다르게 본국에 보고했고 그 이유는 자국 이익에 부합하다고 봤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용주 5·18재단 비상임연구원이 작성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미대사관은 1980년 5월 19일 5·18민중항쟁을 본국에 처음 보고하면서 ‘시위라는 단어 대신 폭동(riot)’을 사용했다.

5월 21일자 전문에서 “광주폭동이 지역 차별 때문에 격화됐다”는 분석과 함께 “광주에서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고 폭력화되는 배경에는 오랜 기간 동안 ‘이등시민’ 취급을 받아 온 전라도와 광주시민의 분노가 폭발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같은 날 전문에서 클라이스틴은 “광주폭동이 심화될 수록 미국이 전두환 신군부를 돕고 있는 것처럼 인식돼 반미감정이 고조될 위험이 있다”고 진단했다.

5월 22일자 전문에서 “군인들은 사적이 필요한 경우 인체에 치명적이지 않은 부품을 사격하는 교전수칙을 준수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등 광주의 상황과 정반대되는 상황을 전했다. 클라이스틴 대사는 1980년 5월 27일 계엄군의 도청전압작전 전날인 26일 전두환 면담 결과에 대해 국무장관에게 “광주의 무법상태 기간이 확대될 것이라 우려를 감지했지만 우리는 한국정부에 군사행동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전문을 보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정욱기자 khh@



‘도전 골든벨’ 창평 얼마나 아세요? 7일 담양 대덕면 만덕초등학교 강당에서 창평현의 역사와 문화를 퀴즈로 풀어보는 ‘제12회 도전 골든벨’ 행사가 진행됐다. 행사에 참가한 고서, 남민, 만덕, 수북, 한재, 창평초등학교 학생들이 정답판을 들고 문제를 풀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법원 “영광군, 한빛원전 공유수면 점용 조건부 허가는 부당”

영광군이 한빛원전의 발전용 냉각해수 사용을 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에 대해 조건부 허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훈)는 한국수력원자력(한빛원전)이 영광군을 상대로 낸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허가 일부 조건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은 한빛원전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발전용 냉각해수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영광군에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받아왔다. 이 기간의 만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2015년 4월21일 영광군에 허가

기간 연장을 위한 변경허가 신청을 했다. 허가권자인 영광군은 변경허가를 내주면서 조건을 내걸었다. 조건부 변경허가인 것이다. 조건은 새로운 어업권자도 권리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을 완료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한국수력원자력은 해당 어업권자들은 원전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어업 면허를 취득한 사람들로 권리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영광군의 조건을 거부하고 소송을 낸 것이다.

법원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할 때 동등이 필요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관련 권리자’에 해당하려면 해당 점용·사용허가로 인한 피해가 예상돼야 한다”면서 “그런데 이 사건 어업권자들은 영광원전 각 호기에 대한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뒤에야 어업면허를 통해 어업을 영위한 것으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할 때 동등이 필요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관련 권리자’에 해당한다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영광군의 각 부관(허가 조건)은 한국수력원자력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한 것으로 비례의 원칙과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신설 신안경찰서 암태면에 짓는다

지리적 중심지 출동 등 유리 새천년대교 개통엔 접근성도

신설되는 신안경찰서는 암태면에 건설된다. 신안군청이 소재한 압해읍이 아닌 암태면에 경찰서를 짓는 이유는 이곳이 지리적으로 신안의 중심이기 때문이다. 출동·상황 대처 등을 고려하면 신안 초입인 압해읍보다는 암태면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경찰서가 없는 신안군에 오는 2020년께 경찰서가 신설되며, 신축 후보지로 암태면 고당리를 최종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위치도>

암태면은 지리적으로 신안의 중심에 있고 내년 8월 새천년대교가 개통되면 접근성도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교통의 중심지로서 신고 출동이나 상황 대처에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신안군도 지역 균형발전과 행정복합타운 건설 등을 들어 암태면을 경찰서 신축 부지로 추천했다.

신안경찰서는 3급지로 60~70명의 경찰인력이 추가 배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사는 전체 부지면적 1만5130㎡,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이며, 내년 초 착공해 2020년 말 완공 예정이다.

신안군은 1000여개의 섬으로만 구성됐다는 특징이 있다. 지리적 특수성은 고려하지 않은 채 치안수요가 적다는 이



유로 경찰서 신설이 미뤄지다가 최근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염전노예’ 등 강력범죄가 잇따르자 정부는 경찰서 신설 방침을 확정했다.

신안경찰서 신설로 인권침해 범죄와 해양범죄 등 섬 지역의 치안수요에 적합한 예방 치안과 해결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섭 전남경찰청 경리계장은 “신축 후보지로 압해읍과 암태면을 놓고 최우선 검토한 결과, 암태면으로 최종 결정했다. 새천년대교가 개통되면 암태면이 신안의 중심이 되고, 압해읍은 신안 초입으로 변방이 된다”며 “경찰권이 지리적으로 중심에 있어야 출동과 상황대처가 유리하고 주민들도 심리적 안정감을 갖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500억대 불법 경마사이트 77명 적발

573억대 판돈이 오간 불법 경마사이트를 운영한 일당과 도박가담자 등 77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573억 원 규모의 불법 사설 경마사이트를 운영한 총책 A(51)씨와 관리인 2명 등 총 3명을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씨 등은 2012년 4월부터 4년동안 목포시 영해동의 한 상가에서 불법 경마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마사회 관련·제주경마장 경기 동영

상을 입수해 도박참여자를 끌어모았다. 경찰은 A씨 등이 판돈 573억원 가운데 약 5%에 해당하는 28억원 상당을 수익금으로 챙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4월 경찰 단속이 시작되자 속칭 ‘바지사장’을 자수시키고 1년 가까이 도주를 이어갔으나 추적 끝에 붙잡혔다.

경찰은 모집책 B(51)씨와 도박참여자 7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검사 ○○○입니다” 사칭 보이스피싱 20대 철창행

○...“서울중앙지검 검사 ○○○입니다”라며 검사를 사칭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행각을 벌인 20대가 철창행.

○...7일 광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11일부터 5월25일까지 광주·경기·부산 등지에서 20대 여성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다. 개인정보가 유출돼 범죄에 연루됐다. 계좌의 돈을 인출해 금감원 직원에게 맡겨

라”는 내용의 보이스피싱으로 9명으로부터 3억6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A씨는 가짜 검찰청 사이트를 개설해 피해자들이 접속·조회하도록 해 범죄 연루를 막고 금감원 직원 행세하며 돈을 직접 챙겼으며 손가락에 특수물질을 발라 지문을 남기지 않은 치밀함을 보였는데, 경찰은 “수사기관에선 절대 현금이나 계좌 이체를 요구하지 않는다. 속지 말고 즉각 신고해달라”고 당부.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지리산 온천지구내 K호텔

**깨끗하게 새단장 했습니다!
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

숙박문의 H. 010-3605-5000
061-783-8090

대형모텔 매매·동업

-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32-1번지
지리산 온천지구내 송원리조트 바로 앞
- 대지 572평 건물 718평
지하1층, 지상 4층, 객실 58개
- 1층 - 식당 /세미나실/객실
2~4층 - 객실
- 전체 리모델링, 6월10일 오픈예정
- 시세/감정가 - 17억
매매 - 14억 5천만원 (조정가능)
- 동업 - 협의 (경험자우대)
- 용자 8억 포함, 법인체 인수 가능
주인직매 H. 010-3605-5000